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정책동향

- 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 정책 및 제도 보완 필요
-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향
- 수요 억제 주택정책 : 중간 결산
- 건설산업 혁신을 업역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및 보완 과제

산업동향

-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정부 및 업계 동향

정책동향

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 정책 및 제도 보완 필요

이보라 연구위원
(bora@ricon.re.kr)

국토교통 10대 분야 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전략 발표('20년 6월 17일,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18년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접목하는 회사에 가점 부여하는 스마트 턴키사업을 고려중이며,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추가('19년 6월 6일)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전과 혁신의 국토교통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5년까지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에서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유망주 육성, Rising Star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한편, 250개 중소·벤처기업이 고속 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Business Champion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계획할 것을 발표함.
- 「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전략」은 ①유망주기업 지원 프로그램(Rising Star), ②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Business Champion) 등 2개 트랙의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임.
 - 유망주기업 지원 프로그램(Rising Star): 창업·자금조달·마케팅 등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21년), 1개 기업 당 최대 4억원(3년간)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창업 공간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지원, 스마트시티 등 일부분야는 중기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등 지원
 - 고속성장기업 육성 트랙 (Business Champion 프로그램):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화 및 시장진출 등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3년간)의 자금 지원과 국토교통 혁신펀드(올 9월 170억원 첫 출시)도 지속 확대, 판교2밸리, 제주 등 조성중인 산업입지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을 조성, 원스톱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판로개척을 위해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구매를 촉진 및 혁신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20.6월),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공사 연계형 R&D 확대

1) 10대 중점육성 분야: ① 스마트시티, ② 자율주행차, ③ 드론, ④ 스마트건설, ⑤ 녹색건축, ⑥ 스마트물류, ⑦ 공간정보, ⑧ 철도부품, ⑨ 자동차 애프터마켓, ⑩ 프롭테크

-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을 위해 건설산업 분야 유일의 전문 창업지원 조직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하여 건설산업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건설 아이디어 구현 및 시제품 제작·실증,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기술대전」 운영,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경영 컨설팅 수행함.
 - 입주기업 현황으로는 ①설계분야의 경우 3D설계자동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설계지원, 지하매설과 전자지도 구축, ②시공단계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건설용 데이터분석 플랫폼, 시공이 용이한 와이드형 브릭, 모듈러 프리캐스트 시공방식, 모듈형 욕실유닛 및 벽체시스템, 드론 활용한 시공현장 데이터 수집, ③안전 및 유지관리분야의 이동형 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를 특수카메라, 홍수 긴급방어 시스템, 소방방재 시스템, 지능형 방범 방충망, 주거시설 내 안전관리 음향시스템의 주요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스마트건설기술 유도정책 필요

- 스마트건설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전략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건설 관련 규제 개선:** 관련기술의 적용을 위해 ICT, 건설기술, 도로 등과 관련된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상의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및 활용시 저해되는 근본적인 규제 요인을 도출 후 관련 법령 개정
 - **스마트건설 기술적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발주제도 도입:** 입찰평가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개선
 -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 발주물량 확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건설공사로 발주확대 유도(※ 일본 I-construction, 공사예정금액이 3억엔 이상인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발주·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며 필요경비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함.)
 - **스마트건설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드론관련 교육, 조정 매뉴얼 교육 등 장비 운용 인력과 소통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BIM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병행
 - **사용 피드백 자료를 통한 보완:** 적용기술의 정밀성 향상을 위한 추후 연구개발 지원과 다양한 적용 데이터 수집을 통한 체계화
- 이러한 정책이 추가된다면 정부가 목표한 ‘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선도국 반열 진입, 25% 이상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25% 이상 공사기간 및 재해율 감소’ 달성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임.

정책동향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향

- 에너지 진단비용 및 공사비 보조금제도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

정대운 선임연구원

(bigluck1@ricon.re.kr)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향

①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의 해결방안으로 '그린 뉴딜' 추진

- 정부는 5월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6월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됨.
 -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비 42.7조원)이 투자되어 일자리 65.9만개가 창출될 계획임.
 -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세 분야로 추진되며, 그린리모델링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에 세부사업으로 포함됨.
- 국토교통부는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임.
 - '20년 3차 추경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에 2,276억원이 반영됨.
 -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경과년수 15년 이상의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3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의 성능향상에 360억원이 반영됨.

② 국내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 금융지원 정책

- 국내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 지원)에 따라 LH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운영·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차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

- 동 제도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30%, 25%, 20% 이상 시, 각각 3%, 2%, 1% (기초생활수급자 4%)까지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 연간 대출 이자지원 금액은 비주거 최대 50억원, 주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함.
-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기금운용)에 의해 관련 사업이 지원됨.
 -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노후건물 및 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소요자금 100%까지 지원, 연리 1.45% 고정금리로 비주거는 5백만원~20억원, 주택부문은 2백만원~30백만원까지 지원됨(8년 균등 상환 방식).
 -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의 가구당 120만원 이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③ 해외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 금융지원 모델 및 정책¹⁾

- 영국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딜(Green Deal)제도를 시행함.
 - 그린딜 제도는 가정 부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하여 그린딜 사업자가 개보수사업을 선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건물소유주가 장기 상환하는 구조임.
 - 2013년 1월부터 실행되어 그린딜 1기, 2기(정부보조금 추가)를 실행하였으나 높은 금리와 연간 납입비, 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미흡한 소비자 보호, 그린딜 사전 평가자들의 비숙련도, 수혜 계층의 제한, 낮은 에너지 빈곤 분제 해결도 등의 문제로 2015년 7월 공식 폐지됨.
- 독일의 제도는 'CO₂ 감축 건물개보수프로그램(CO₂ Gebäudesanierungsprogramm)을 시행함.
 - 동 프로그램은 독일 DTW immobilendarlehen은행에서 독일재건은행(KfW)의 이차보전 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임.
 - 대출한도는 최대 € 50,000이며 1%의 고정금리(10년간)에 20~30년의 상환기간을 가지며, 주택요건은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주택'으로 '최소 40kg/ 이상'의 탄소배출 저감조건을 만족해야 함.

1)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건물효율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 또한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단독·다세대(2세대 미만)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에너지 컨설팅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전체 사용금액의 50%, 최고 € 10,000).
- 미국은 주(State) 단위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보조금, 융자지원 등의 다양한 재정 지원제도를 실시함.
 - \$ 100,000 이상의 보조금과 융자지원 정책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메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는 에너지 효율부문에 있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는데, 메사추세츠 주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70여개의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캘리포니아 주는 약 180여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④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향

- 정부의 '그린 뉴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금융지원 등)이 필요함.
-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에 대한 재정 지원, 융자지원과 더불어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도입, 그밖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특히, 서울시 집수리 사업 중 가꿈주택 사업과 같이 보조금(공사비 50%)제도의 확대·적용도 요구됨.



정책동향

수요 억제 주택정책 : 중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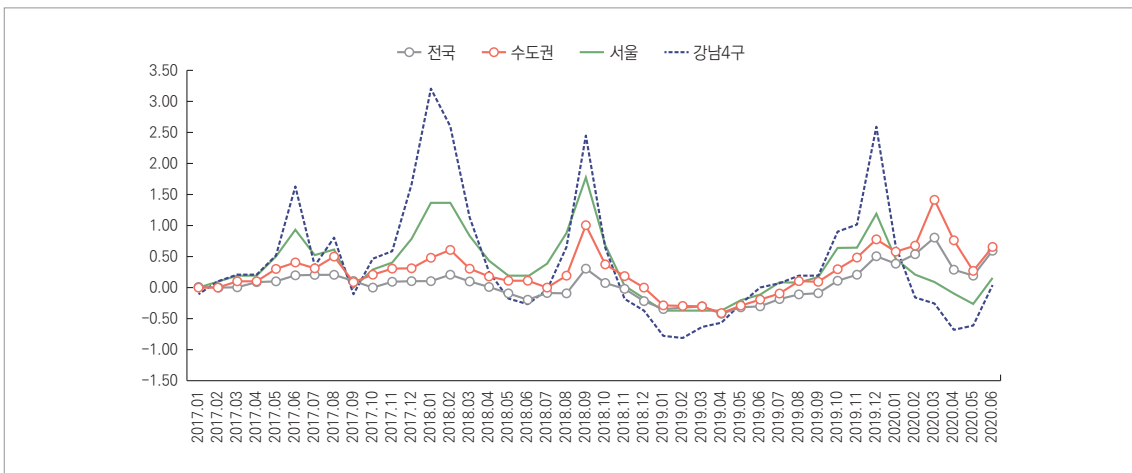
권주안 연구위원

(jooankwon@ricon.re.kr)

- 정부 수요억제 정책과 주택시장 변화 (2017~2019)

- (2017년) 6월과 8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재건축과 금융규제를 강화하였고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진정.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68개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잠시 상승한 후 안정되었음.

전월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 : 2017.1~2020.6



자료 : 한국감정원

- (2018년) 지속적인 수요 억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8월 이전 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9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9.13대책과 공급 확대 일환으로 제3기 신도시를 담고 있는 9.21대책이 발표된 후 가격은 안정세로 진입. 다만 수요 억제에 더하여 공급 확대 발표 이후 9개월 내외 안정적 수준 유지
-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수요 억제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 등을 포함한 제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발표한 5.7대책으로 시장은 안정되었으나 8월 이후 다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되어 급기야 12.16대책이 발표되었음. 고가주택과 2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불허를 포함한 강력한 수요대책으로 가격은 안정세로 전환된 듯 했으나 2020년 2분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진입하는 등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

- 현 정부 출범 후 2019년 까지 총 18번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화되지 못하였으며 효과적인 수요 억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과 지역 간 격차**

- 아파트 가격 변동 패턴은 지역 관계없이 비슷하나 지역별 변동 폭은 차이가 있으며 변동 폭은 크기 기준으로 '강남4구>서울>수도권>전국' 순임.

- 강남4구와 서울은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크나(각각 3%, 1~2% 내외), 하락 국면에서는 변동 폭은 크지 않음. 결과적으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과 동참 심리가 혼재된 사회적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시장 안정화 대책이 강남구 등 몇 개 지역에서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나 지역시장의 이질성을 인지하지 못 했으며 수요 억제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지역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음.

- 지역별 ㎡ 분양가를 2016년 말과 2020년 6월을 비교하면, 서울과의 분양가격 차이는 30% 내외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시세는 이 보다 더 크므로 시세 기준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 통계자료 최초 시점(2015.10월)과 2016년 말을 비교하면 격차 증가율은 11~15% 정도였음.

지역별 ㎡당 분양가격(천원)

지 역	2016.12월	분양가 격차(vs 서울)	2020.6월	분양가 격차(vs 서울)	분양가 격차 증가율
전 국	2,901	3,542	3,736	4,615	30.3%
수도권	4,377	2,066	5,637	2,714	31.4%
광역시	2,972	3,471	3,919	4,432	27.7%
서 울	6,443	0	8,351	0	-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0년 들어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오랫동안 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정부는 최근 '공급 확대' 카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건설 조기 추진 그리고 재건축 관련 대책(공공재건축)등이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다른 한편 도시지역에 집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완료 후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증가, 재정착률 확대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단기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급 대책으로 판단됨.

정책동향

건설산업 혁신을 업역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및 보완 과제

박승국 연구위원
(skpark@ricon.re.kr)

건설산업 혁신 분야별 세부 시행 방안(20년 6월 17일 국토부)

①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 종합-전문업체 모두 과거 5년간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상호진출 촉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업체는 전체실적의 2/3을 인정하고,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 (종합 전체 실적)142조원 ⇒ 2/3인정시 93.7조원, (전문 원·하도급 전체실적) 93조원 (*18년 계약액 기준)
 - ※ 업역폐지 초기에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실적을 최대한 인정하되, 제도 정착 이후('21년 이후)에는 상호시장 시공 실적만 인정

② 발주가이드라인 마련

- 업역폐지로 공사종류≠입찰자격이 되어 공사종류 판단과 입찰자격 허용을 구분하여 결정 필요
- (법적성격) 시행령상의 근거 신설,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국토부 지침으로 개정
- (발주자 결정사항) 공사내용 및 난이도에 따라 주·종공사 및 공사종류(종합/전문)를 결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업종, 주력분야 등) 선택. 주력분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지 여부는 발주자 선택사항임을 명시
- (사전검토 절차) 입찰참가 자격(업종, 주력분야 등) 검토 절차 마련
- (정보제공) 등록업종, 주력분야, 실적 등 확인을 위한 정보체계 소개
 - ※ 규제로 작용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제도활용 방법 요령 등을 안내하는 참고자료 성격의 가이드 제정 추진

③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통합 기준) 공공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겸업실태와 현실 여건도 함께 고려
- (통합 업종 수) '혁신 로드맵'은 29개 업종을 10개 내외로 통합기로 했으나, 시장 혼란과 업계 적응을 고려하여 14개(안) 우선 추진
- (등록기준) 혁신방안의 등록기준 완화 기초를 반영하고, 업종통합시 등록기준 미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업종내 최저 수준 설정

④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구분) 업역개편 초기에는 현재 전문업종(28개)을 기준으로 주력분야 구분 → 혁신대책 안착, 기술변화 등을 감안하며 추가 세분화(~'24)
- (공시방법) 주력분야 구분 및 취득기준 등은 시행령 개정 추진, 실적 취합, 취득기준 검토를 위해 실적공시(매년 7월)와 함께 시행('21.7)
- (효력) 발주자 선택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유자격자 명부 등에서 업종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활용
※ 종전 업종을 대체하는 규제가 아닌 발주자 선택권 강화, 사업확장 지원 등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 임

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 종합공사, 전문공사와 별도로 '유지관리 공사'를 건산법에 신설하고, '유지관리 공사'는 유지관리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교육이수·자격취득)가 각자 등록한 업종(전문 또는 종합)의 업무범위 내에서 시공 가능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전문건설업(대업종 기준 3개까지) 또는 종합 건설업종(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하여 유지보수공사 및 신축공사도 참여 허용('22년~'23년간 자율전환, 미전환 업체는 '24년 일괄 전환)
-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여 '23년 말까지는 현재 협회가 교육·자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시설물업 개편에 맞춰 '24년부터 협회 기능 개편

⑥ 토목건축업 개편

- 토건업의 상징성과 해외수주 도움 등을 고려하여 '존치', 다른 업종과의 '차별성' 대폭 강화
- '종합성', '책임성', '혁신성' 강화
 - (신규 등록) 5년간 토목 및 건축업 등록·실적을 모두 보유. 5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력이 없을 것
 - (기존 사업자) 최근 5년간 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후 등록말소(토목 또는 건축업으로 전환)후, 5년간 등록제한
 - 스마트 기술 도입실적, 전자적 대금지급, 상호협력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평가 의무화

⑦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시범사업 대상) 연내 준공이 가능한 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총 9개 사업 선정
 - 도로공사 4건, 철도시설공단 2건, 철도공사 3건
- (시범사업 유형) 하나의 공사를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업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실시

혁신 분야별 세부 시행 방안의 향후 보완 과제

- 전문업종 대통합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사는 종합과 전문으로 공사를 구분하는 경과 규정 도입필요하며, 향후 운용 실태를 시행 3년 후 재검토하여 균형 잡힌 경쟁관계 형성 필요
-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입찰 기준 및 입찰 경쟁도 등을 분석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실적 인정 기준의 조정 필요
- 발주가이드 마련시 주력분야 공시제는 참고자료의 성격이 타당하며,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공사 유형별로 종합과 전문의 입찰참가를 안내하는 다양한 발주 예시 마련 필요
- 주력분야 공시를 현행 시공능력 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공시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 자료체출 등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근거 마련 필요
-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의 교육, 자격증 발급, 실적 신고 등 세부 사항 마련 필요
-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국토부·기재부·행안부·조달청 협동으로 발주제도 시스템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상호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격심사와 PQ 심사의 항목 및 기준 개정이 필요

산업동향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박선구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2020년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 감소(전년동기대비 2.9% 감소)
 - 1/4분기와 비교하면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건설 및 설비 투자도 감소로 전환
 -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 정부소비 역시 1.0% 증가
 -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3% 감소, 설비투자 역시 2.9% 감소
 - 특히, 수출은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줄어 16.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
- 2020년 2/4분기 성장률(-3.3%)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선방(미국 -9.9%, 일본 -8.5%, 독일 -10.1% 예상)
 - 3/4분기 성장률은 수출 회복세에 따라 반등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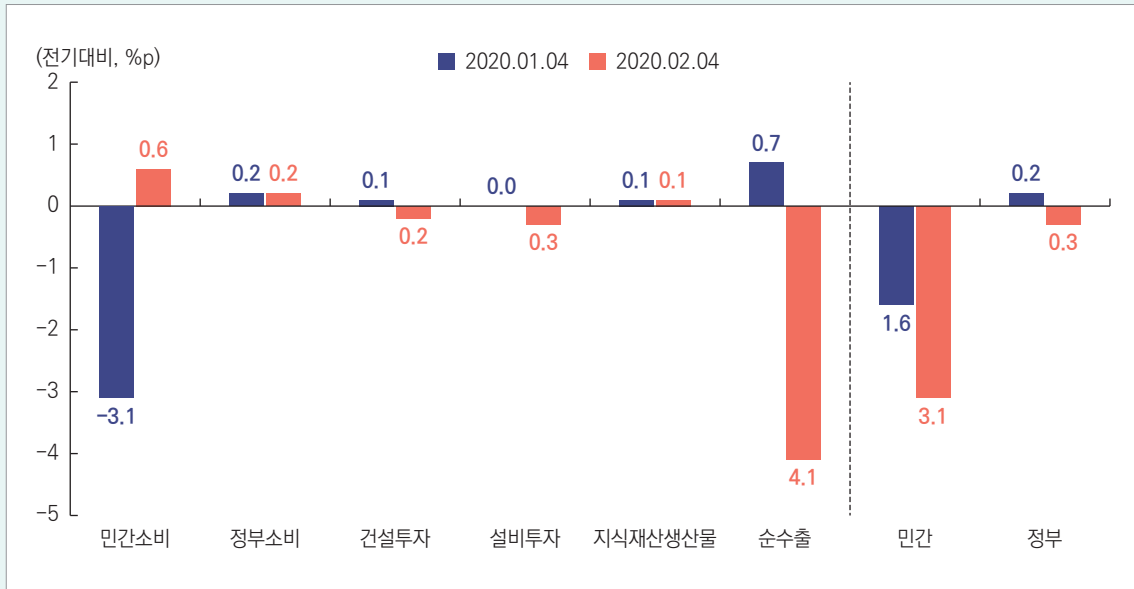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¹⁾

구분	2018				2019p				2020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GDP)	1.1	0.6	0.6	0.9	-0.3	1.0	0.4	1.3	-1.3	-3.3	(-2.9)
민간소비	1.3	0.3	0.5	0.5	0.1	0.7	0.4	0.7	-6.5	1.4	(-4.1)
정부소비	2.2	0.4	2.0	2.3	1.1	1.7	1.7	1.8	1.4	1.0	(6.0)
건설투자	1.3	-2.7	-6.9	2.3	-0.7	2.9	-6.4	8.0	0.5	-1.3	(0.1)
설비투자	4.7	-8.9	-3.3	2.4	-8.5	2.6	1.7	2.6	0.2	-2.9	(1.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4	0.5	1.0	0.0	1.5	0.7	0.4	0.4	0.8	1.6	(3.2)
재고증감	-0.2	0.5	-0.6	0.8	0.2	0.0	-0.6	-0.7	0.6	0.2	(-0.5)
수출	3.7	1.0	4.2	-1.6	-3.1	1.9	4.5	0.6	-1.4	-16.6	(-13.6)
수입	5.4	-2.2	-0.8	1.0	-3.2	2.9	1.2	0.4	-3.6	-7.4	(-9.2)

주: 1)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 2020년 2/4분기 GDP 성장기여도는 수출부문이 -4.1%p로 나타나 2분기 국내총생산 약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정부 및 업계동향

1. 정부동향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7. 1)**
 -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인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 기준 마련
 -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 제시(기준 세분화 및 비용 산정 현실화)
- **서울시,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계획」 발표(7. 8)**
 -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그린뉴딜 추진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 목표로 2022년까지 도시숲 조성, 2035년부터 친환경 차량만 등록,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강화 추진
- **국토교통부,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7. 9)**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맞춤형 개선,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간소화,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 14건
-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발표(7. 13)**
 - 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 6대 전략(과제수)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8),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32),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18)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발표(7. 22)**
 -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배경에 주차장 문제 외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
- **LH, 올해 1.7조 주택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계획 발표(7. 22)**
 - 올해 주택건설 부문 25건, 1조 7,901억원 규모(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대상)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 전년대비 170% 확대
- **경기도, 「경기도형 뉴딜 추진」 발표(7. 23)**
 -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로 구성.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5조3,800억원(도비 1조3,000억원) 투입, 시간제 일자리 등 32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7. 23)**
 - ①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투자 밀착 지원, ②투자어로 파약을 위한 카라반 활동 강화(월 1회 이상), ③투자어로 접수창구 상시 및 다양화
 - 7조6천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 기업투자프로젝트도 연내 25조원 이상 추진
 - 12조7천억 원 규모의 포괄주의 및 혼합형 민자사업 발굴
 - * 포괄주의 사업 :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 스킴 ▲수소충전소 확충 ▲내진보강 사업▲LED 조명교체 사업 선정
 - * 혼합형 사업 : 철도, 균형발전프로젝트 민자전환 사업 등 수요 부족으로 BTO 방식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수요는 있으나, 수익률은 높지 않은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 적용

2. 학계동향

- **주택산업연구원, 「2020년 7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발표(7.10)**

- HBSI 전망치는 68.7로 전월대비 17.8p(↓) 큰 폭 하락.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6.17대책 발표로 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되면서 7월 주택사업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연구원, 「비대면 비즈니스 서비스의 유형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7.7)**

- 비즈니스(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제안: ▷비대면 사업 아이템 및 정부의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비대면 사업 관련 R&D 지원 강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색, ▷ K의료 산업의 글로벌화 모색
- **KT경제경영연구소,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생활」 발표(7.6)**

- 코로나19가 가정, 비즈니스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국가와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 검토
- **서울연구원,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추진해야」 이슈페이퍼 발간(7. 13)**

- 제로에너지건물(ZEB) 리모델링 사업의 양적 확대로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시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필요 언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수소경제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7. 16)**

- 독일의 수소산업 현황,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계획, 수소경제 활용의 종착지, 모빌리티와 그 외 분야 분석과 우리나라의 독일 수소시장 진출 전략
- **국토연구원,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브리프 발간(7. 20)**

-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지역 배분,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내 수요계층별 배분, ▷공공주택의 적정 공급 목표 설정, ▷계층별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3. 업계동향

- **해외건설협회, 「2020년 상반기 수주통계」 집계 결과(7. 2)**

 - 2020년 상반기 수주통계 집계 결과(‘20.6.30 기준), 80개국에서 269건, 161.4억 달러 수주
 - 작년 상반기 수주액(119억2914만3000달러) 대비 35% 이상 증가, 시공 프로젝트 건수(1835건)도 전년 동기(1620건) 대비 13%(215건) 증가
 - 수주계약 건수는 작년 동기 318건에서 올해 269건으로 15% 가량 감소

-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발표**

 -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 미·중간 책임공방으로 중소기업 86.3%는 무역 분쟁이 확산 예상 및 분쟁 지속기간 ‘6개월~1년 이내’ 응답이 45.0%로 가장 높음
 - 분쟁 영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1.3%)’라고 응답
 - 대응전략은 ‘별도 대응방안 없음(42.0%)’이 가장 높아 대외 리스크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업이행보증상품 출시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 공사현장별 발급」 도입(7. 17)**

 - 사업이행보증: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방식

- **현대건설, 현대로보틱스와 「건설분야 로봇 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위한 MOU 체결(7. 21)**

 - 건설 현장 작업용 로봇 개발, 모바일 서비스 로봇 산업, 현장건물 내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 등 건설산업에 최적화한 로봇 기술 경쟁력 강화에 협력
 - 로봇 자율주행 통합 소프트웨어 공동 구축 및 입주 고객 택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로봇 사업 추진